

21世紀 先進經濟社會 定着을 向한 韓國의 課題*

郭 承 滌**

< 目 次 >

- I. 序 言
- II. 21世紀의 世界環境
- III. 21世紀에 있어서 韓國의 모습과
問題提起
- IV. 經濟外的 環境改善
- V. 經濟環境 改善
- VI. 結 言

I. 序 言

平和의 環境속에서 20세기는 끝나고 우리는 머지않아 21세기를 맞이할 것이다. 21세기를 앞두고 세계는 어떻게 진전 될 것이며 우리경제는 어떻게 되어야 하며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민이 갈망하던 民主化時代가 시작되고 우리사회가 國際化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관심이 21세기 環境과 우리과제에 기울어지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환영해야 할 것이다.

21세기에서의 國內외環境은 크게 변모할 것이다. 21세기에 우리경제가 先進經濟로 정착하려고 할 때 문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경제의 선진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본 論文의 主眼點은 선진화달성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과제를 찾아보

*이 논문은 1992년 8월 20~21일간 서울에서 개최한 국제한국인경제학자 학술대회 발표논문임.

**美國 Howard大 經濟學科

고 과제해결의 구체적 조치를 제시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 경제의 강한 점이나 과제 업적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금년 또는 내년에 당면할 經濟問題의 해결책 제시도 시도하지 않는다. 그러나 21세기를 앞두고 중장기간에 걸쳐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해 줌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한 政策手段選擇에 대하여 암시해 줄 것이다.

앞으로의 세계환경은 정치적으로 자국내의 이해를 추구하고 경제적으로는 自由貿易重心體制로 지향되고 기술적으로는 電子中心으로 발전되어 나갈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세계는 작은 지구촌으로 변모해 가고 개인의 選擇權利가 강화되는 반면에 정부의 부당한 간섭은 지탄을 받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이와같이 대내외 환경변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先進經濟圈으로 진입하고 선진권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율성과 이노베이션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이 필요에 비하여 우리사회와 경제는 많은 구조적 성격의 문제를 갖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의 제도와 관습에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이다. 개혁과 변화는 현존하는 환경에 수혜자이건 또는 비수혜자이건 다 같이 고통과 불안을 가져오게 한다. 그러나 개혁과 변화는 희망을 주고 선진화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과 변화를 환영해야 한다. 이것은 '어떤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사의 대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적절히 대응하는 나라는 흥하고 그렇지 못하는 나라는 쇠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本考의 제2절에서는 21세기에 있어서 세계경제환경은 공평한 경쟁과 자연보호를 강조하고 기술제품의 수명기간이 짧게 되는 환경이 될 것을 언급하였으며 제3절에서는 향후 21세기에 우리나라도 선진된 시민생활이 기대되지만 개혁의 노력이 요구됨을 지적하였다. 우리의 과제는 우리경제의 國際競爭力提高와 민간위주 시장경제원리가 제도적으로 정착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4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목표달성위주와 쉽게 달성되리라고 믿는 행동방식은 수정이 불가피하고 男女平等의 실현을 지향한 노동조건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의 과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이 개편되어야 하며 政府公務員任用制度는 보완되어야 한다. 제5절에서는 경제과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교육과 기술발전 그리고 식수 등을 포함한 사람의 기본욕구충족과 산업폐기물 처리, 공해 오염방지에 세출정책의 우선권을 주어야 하며, 조세제도는 단순화하여야 하고 直接稅 중심으로 개혁

되어야 함을 제시했다.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차별적 규칙과 政策金融 支援金融은 폐지되어야 하며 금융정책은 목표이자율 달성제도로 지향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의 산업정책은 전체분야의 기술발전기회 육성정책으로 변모되어야 함을 제의하였다. 끝으로 제6절에서는 統一經濟時代를 대비한 기본전략을 언급한 후 선진경제사회정착을 향한 과제를 대할 때 취할 우리의 각오와 태도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II. 21世紀의 世界環境

21세기의 정치적, 경제적 특성은 무엇일까? 역사적으로 이집트로부터 바벨로니아, 바벨로니아로부터 페루시아로, 페루시아로부터 로마와 유럽으로, 유럽으로부터 미국으로 정치·경제적인 주도권이 변천하였다. Abdulah를 위시한 학자들은 21세기의 정치·경제적 주도권이 일본을 중심으로한 아시아로 이동할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Thurow교수는 유럽이 이들 주도권에 있어 유망하게 부상할 것으로 보이나 미국이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21세기에 있어 일본의 역할이 클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세계의 정치적, 경제적 구심역할을 하기엔 일본은 정치적 지도력과 자국시장을 다른 나라에서 개방할 의향이 있는가 등에 대해 너무나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제2차세계대전 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세력으로 전개되었던 冷戰이 소련과 그 衛星國家들의 일방적 붕괴에 따라 막을 내렸다. 향후에는 냉전종식과 더불어 미국이 유일한 軍事的 超強大國이 될 것이며 21세기에도 초강대국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유럽의 경제적 공동체, 일본경제의 성장 등으로 인하여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 등이 세계 경제적 힘의 중심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세기에 있어서 중국의 힘은 매우 클 것이다. 중국의 풍부한 인력자원과 이에 기인한 경제규모와 무역의 급격한 팽창은 세계경제의 정치 흐름에 지대한 영향력을 줄 것이며, 특히 동남아의 정치와 무역상황에 큰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지난 10년 간의 半導體, 通信分野 등의 ME(Mecroelectronics)기술, 교통수단 등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하여 세계는 그야말로 ‘지구촌’화 되어가고 있

다. 21세기는 보다 좁은 세계가 될 것이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 나라이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제규모의 대소와는 관계없이 한 나라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제화됨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는 좁아지고 있는데 반하여 세계 전반에 걸친 산업화로 인하여 自然環境條件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환경과 인간존속과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한 자연환경에 특별한 관심이 고조되어 自然環境條件의 악화를 방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 결과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규범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環境條件 改善과 廢棄物 淨화를 지향한 상품생산과 기술개발이 또한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의 경제활동은 좁아진 지구촌에서 영위되므로 나라간에 존재하는 경제적 유대와 상호의존도는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 국가간 비교적 자유로운 資本移動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해외직접투자가 성행할 것이다. 이에따라 한 나라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경제영역은 그의 통치영역과는 큰 차이가 있게 되며 그 차이는 점차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그 결과 통치지역내에 있는 산업과 고용의 이해를 대변하는 보호주의 추세가 정치적 관점에서 강하게 대두될 것이다. 자국의 이해를 옹호하는 보호무역투자 질서가 요구된다. 따라서 정치적 보호주의의 선택경향과 경제적 자유주의의 선택경향은 經濟의 地域化 (Regionalism)을 가져오고 국가간 쌍무협상을 통하여 자국의 이득을 증가하려고 기도할 것이다. 이에따라 제2차대전 후 관세인하,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중심으로 다룬 多者協商(Multilateralism)에 따른 자유무역환경이 점차적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각 국가는 어느 한 특정한 국가의 規範이나 制度에 의하여 지배받기를 원하지 않고 自國의 政治的 利害를 대변하려고 한다. 따라서 세계경제질서를 대다수 국가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규범을 준수하면서 국제무역의 신장을 회구할 것이다. 세계는 상호 합의된 규율에 따라 무역과 투자가 허용될 소위 자유로우나 공평한 경쟁체제를 형성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비교적 자유주의 무역정책을 고수한 미국도 國內經濟優先政策을 채용하여 國際競爭力強化를 기도할 것이다. 일본과 다른 아세아 경제의 운영방식, 특히 정부정책이 기본적으로 배타적이라고 인식되어 그들 국가에 대하여는 예외적인 규범과 정책수단을 적용하려고 할 것이 예상된다.

향후에도 세계의 기술은 電子技術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다. 전자를 중심

으로 하여 발전한 기술은 기술단위당 소요되는 자연자원의 필요량을 낮게 하는 반면에 기술을 모방하는 것을 극히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基礎科學分野의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게 한 결과, 응용기술의 변천이 예상하지 못할 속도로 나타나게 된다. 이에 따라 특정한 기술의 유효 수명기간은 단축될 것이며 특정한 기술을 사용한 상품에 대한 수요기간도 단축되어지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III. 21世紀에 있어 韓國의 모습과 問題提起

21세기에 한국은 先進經濟社會로 정착되길 원할 것이다. 重化學中心으로 이룬 경제의 산업화는 오염, 공해, 그리고 교통문제 등을 심화시켜 더 이상 생활환경조건을 무시하고 物量的 경제발전을 옹호할 근거를 제공하지 못할 상태에 조만간 도달할 것이다. 따라서 21세기에 우리의 환경은 정화되길 바랄 것이다.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진전되고 경제적으로 국제화 되어 나감에 따라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풍토가 조성될 것이다. 이에 기인하여 정부위주의 경제운영질서로부터 가격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市場經濟秩序가 정착될 것이다.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기를 원할 것이다. 근로자는 자기가 한 노동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는 관계가 성립되기를 원할 것이고 기업독점이나 정부 특정기업이나 개인에게 주는 특혜조치는 불가능하게 되고 더욱이 사회적으로 규탄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이 21세기에 선진화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은 기존 선진사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과 우리의 제도와 규율이 분명해야 하고 국제화에 맞게 되어있어야 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관계 또는 人爲的 사고에 좌우되지 않고 정부정책이 제도의 틀안에서 시행되어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은 국민과 해외의 경제에 대한 확실성을 높인다. 기업은 기업 자체가 스스로 기존의 기술을 습득하고 신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연구개발조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기술도입이나 모방기술로써 상품을 생산할 때 상품비용이 커지고 適期에 상품을 공급하기가 어렵게 된다. 근로자는 한편으로는 기술과 경쟁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임금이 낮은 저개발국의 근로자와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도 꾸준히 기술변화에 대응할 준비와 실습을 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21세기의 국제환경과 우리 국민이 회구하는 우리사회, 특히 경제의 양상을 고려할 때 우리경제는 강한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21세기에 진입해야 할 것이다. 21세기에 있어서 국제경쟁력의 근원은 개인의 창의력과 기업의 자율성을 통하여 이루어 지는 이노베이션에 있는 것이다. 21세기를 바라보는 우리의 과제는 어떻게 개인의 창의력이 고조되고 Schumpeter적인 이노베이션이 줄기차게 나오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로 귀착한다. 따라서 개혁을 필요로 하고, 그리하여 새로운 규범이 우리사회에 정착되도록 해야한다.

IV. 經濟外的 環境改善

본 절에서는 우리경제가 이노베이션을 창출하고 先進國型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부터 시도해 나가야 할 개혁중 몇가지 經濟外的인 환경과 변화를 제시하고 다음 절에서는 經濟內的인 環境改善方向을 제시해 보려고한다.

우리사회에는 행위와 정책을 판단할 때 결과만을 가지고 그 행위와 정책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成果爲主의 판단방식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나 어떤 한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과정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공평한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관습이 필요하다. 21세기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승부를 결정하지만 공평한 규칙내에서 경쟁이 진전되어가는 질서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합의된 게임의 규칙에 상반되는 수단을 통하여 우리의 經濟利害를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국가는 불공평한 수단사용을 지적하고 적절한 보복제제조치를 취할 것이다. 국내에서도 규칙과 절차가 모든 사람에게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인식되어야 한다. 기업간, 기업과 소비자간, 가진자와 가지지 않은 계층간의 이해관계는 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시간소요상의 문제를 이유로 하여 일방적인 강압과 강제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形式的으로는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쉽게 과제를 결정하고 더욱이 쉽게 과제가 달성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 21세기 시대엔 信用이 성공의 비결임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문제를 생각한 후 책임을 지고 약속하는 관습이 정착되어야 한다. 과제의 목적이 쉽게 달성될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주저하지 않고 과제를 착수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태도는 경제 규모가 작고 단순한 경우에는 유용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경제규모가 크고 국제화 되는 상태에서는 기대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確率을 높게 한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朝令暮改라는 어구가 자주 인용되고 있고, 公約해 놓고 공약을 무시하는 사례가 통상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한다고 공약한 지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어느 누구도 주저치 않고 민주주의가 실제로 현재 완벽하게 시행되고있는 나라라고 단언할 입장을 취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 노벨수상자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또는 나오기를 바라면 우리사회가 개인의 개성을 높게 평가하고 학문연구에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과제는 크든 작든 간에 應分の 노력과 시간을 소요한 후에 성공적으로 달성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教育方法은 國際競爭力伸張과 국제화를 위해서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낙후된 상태에 있다. 어떤 사업계획을 다양한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의논하면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인력배양교육방법이 필요하다. 이같은 자격을 갖춘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도 學生對比 教師와 교육투자비용의 대폭적인 증가가 필요하다. 암기위주와 획일주의 교육으로부터 판단력과 협의력 위주의 교육으로 변해야 하고 수학과 언어교육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수학과 언어교육은 논리적인 사고를 배양하는 교육의 바탕이기 때문이다. 각 나라의 문화배경과 정치배경 등에 대한 지식을 가진다는 것은 건전한 세계인의 의무이다. 한국역사 뿐만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교육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학생의 취미와 개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과목선정범위를 확대해 주어야 한다. 이것은 개인의 創造力과 專門化를 가져오게 하기 때문이다. 수학, 언어 그리고 역사 등 기초과목 교육이 철저하지 않고 선택과목 선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건전한 성격과 판단력을 갖춘 노동력이 배양될 수 없고 자체 기술개발의 소지는 더욱 기대할 수 없다.

21세기에는 특정한 기술의 有效壽命은 더욱 짧아진다. 기존의 지식과 기술을 분별없이 무조건 강제로 소화시키는 교육은 그 기술의 수명이 끝나면 구조적으로 失業者가 되는 사람을 배출하게 된다. 21세기를 대비한 교육의 강조점은 현존하는 지식의 습득보다는 지식의 이해에 두어야 한다. 기존 지식을 소화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지식을 자기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습득할 능력을 배양해 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와같은 基本分野強調教育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기도할 경우에 있어서도 이용가능한 인력을 준비

해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여성에 대한 교육은 남성못지않게 활발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성인력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지 않았다. 그런데 향후에는 우리나라도 남녀평등의 민주주의 의식이 강해짐에 따라 여성의 勞動參加性向이 더욱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외근 은행 사무직여성의 결혼 후 계속취업 증가현상은 결혼과 더불어 취업을 종결할 때 상실될 미래소득을 고려하여 가정생활의 어려움이 다소 있더라도 직장생활을 유지하려는 의욕의 결과인 것이다. 시간제 고용형태와 流動的인 勤勞時間制度를 도입하여 여성도 취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노동조건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또한 남녀평등을 존중하는 선진사회의 요구이기도하다.

자연환경과 경제발전의 관계는 단기적으로는 대립관계인 것 같이 보이나 장기적으로 보면 상호 보완관계가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아프리카가 현재 사막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 울창하였던 자연산림을 무분별하게 벌목한 결과, 지하수원이 고갈되고 雨量을 절감시킨 것이 아프리카 사막화를 야기하게 한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자연환경 조건의 유지와 공해와 오염의 방지는 정부의 固有領域이며 또한 개인의 의무이기도 하다. 우리는 자연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량적 경제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정부와 개인은 자연보호에 미온적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의 자연에 대한 인식은 物量的 경제발전에 주안점을 두었던 과거와는 달라져야 할 것이다. 자연의 꽃과 숲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새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생활환경이 마련되어야만 생활이 풍부해지고 선진사회의 과일을 향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역할은 市場機能을 활성화하고 개인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즉, 정부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과거 권위주의를 기반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된 정부의 단위기관은 선진화 달성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든다. 정부의 과제를 보다 쉽게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조직 개혁은 필요하다. 정부조직은 정부자체내에서 분업과 경쟁의 원칙아래 체계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정책수행이 효율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정부부처조직의 개편이 선진화 달성을 위해 바람직스럽다.

정부의 경제에 대한 의무는 通貨價值를 안정시키며 공평한 세입획득, 효율

적인 세출, 그리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전체적 이해관계에서 정부내의 기관으로써 金融當局(中央銀行)이 통화가치 안정을 책임지는 금융정책의 주무기관이 되고, 財務當局(財務部)은 공평하게 모든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국민이 책임질 채무를 관장하는 세입과 채무정책의 주무부서로써 역할을 하도록 개편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세출정책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국민이 선택한 執政政黨의 정치이념이 반영되도록 수립되어야 함은 민주사회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세출예산정책은 통치권자의 기관이나 통치권자가 위임한 정부기관 경제기관(경제기획원)에서 과감하게 행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통계와 상품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한 정보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가계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정확한 통계와 정보를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통계담당부처(통계청)는 과학적으로 자료가 수집되고 분석하는 것을 전담하며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조직의 개편과 더불어 政府人事에 대한 현행 규칙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外交를 하는 데도 통계자료분석이 필요한가하면 오염방지나 의약품 관리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나아가서 국가경제간의 상호의존성 때문에 앞으로 경제정책수단의 선별과 혼합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할 때가 많을 것이다. 이와같은 필요성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현재의 公務員 任用制度는 전문지식을 가진자를 채용할 수 있게 수정되어야 한다. 정책수립에 직접 참여하는 고급공무원은 정부내외에서 누구나 자격조건이 충족되면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사제도가 한 예이다.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인위적인 진입의 장벽은 제거되어야 한다. 필요에 따른 인사 선택은 정부운용참여의 민주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정부운용지원에 따른 국민부담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V. 經濟環境 改善

정부의 지출정책은 교육부문에 중점적으로 투자되어야 한다. 교육은 생산설비를 활용하고 일의 가치를 알게 하고 근로의식을 고조시켜 준다. 따라서 이노베이션의 원천을 크게 하는 것이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경제발전에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다른 한편으로

자연환경개선과 社會間接資本蓄積과 개발분야에 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의 자질과 자라난 환경은 각각 다르다. 재산, 緣故 그리고 육체조건 등 조건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기회를 주고 경쟁하게 하는 것은 불리한 조건에 있는 계층에게는 불공평한 경쟁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계층에게 특별한 지원이 허용되는 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통계적으로 보면 적어도 우리나라의 GNP대비 조세부담비율(약 20%)은 OECD의 평균비율(40%)보다 낮은 수준에 있다. 그러나 기업과 가계에게 각종 보이지 않는 非租稅 課稅가 부과되고 있으며 각종 세원에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고 여러가지 명목으로 만들어 놓은 조세감면조치 등 때문에 모든 가계와 기업의 조세부담율이 일률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과세의 면세조치를 받는 대상이 너무나 많은 실정이다. 정부가 내라는 세금을 다 내고 장사를 했다가는 기업경영을 할 수 없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것은 稅制가 복잡하고 불공평하게 운용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불공평한 세제운영은 계층간에 갈등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21세기에 조세부담의 형평화와 세입징수에 따른 사회비용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현 조세제도는 개혁되어야 한다. 소득분배에 逆機能을 하는 간접세 비중은 낮추고 반면에 직접세 비중을 높임과 동시에 모든 사람이 조세를 내는 조세제도를 채용해야 한다. 직접세는 소득발생 요소와 관계없이 총소득수입의 총계에 세율이 적용되고 감세요건이 최소에 지나지 않는 극히 단순한 제도로 개편되어야 한다. 조세제도가 단순하게 되면 사회는 자연적으로 정화되고 개인의 창조력이 제고되게 된다.

21세기를 앞두고 금융분야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많은 개혁과 조정이 필요하고 낙후된 상태에 있다. 通貨金融機關(第1金融圈)과 非通貨 金融機關(第2金融圈)의 활동영역은 구분되어 있고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은행, 비은행 간은 물론 금융기관들 간에도 큰 장벽이 놓여 있게 하고 금융기관간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경쟁을 약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간의 업무영역구별조치는 제거하고 兼業主義制度를 채용하여 規模의 經濟利得을 발생케 하는 금융, 자본 시장 통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와같은 통합은 예금 유치 경쟁을 가져와 자본기관 자체의 財政安定度를 害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안정도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활동

과 자산 내용에 대한 감독의 강화도 금융제도 개혁시 동시에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

제1금융권의 비중이 급속하게 감소되고 상대적으로 제2금융권의 비중이 비대해지고 있다. 금융정책은 제1금융권 중 주로 시중은행을 통하여 시행되기 때문에 현재의 환경아래서 금융정책의 효과는 제한될 수 밖에 없다. 금융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금융기관에 존재하는 차별적 규칙은 철폐되어야 하고 비통화금융기관에도 支拂準備措置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금융융자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지만 정책금융융자제도는 중앙은행의 금융정책 수행에 막대한 장애요소가 된다. 정책금융융자제도는 금융시장이 선진화되어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이용가능해야 한다는 소위 동일한 기회원칙 관점에서도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特殊 金融支援政策은 제도적으로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금융정책은 현재 총통화량 관리를 중심으로 하여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총통화관리 중심 운영은 이자율 중심 운영으로 변천되어야 한다. 총통화관리운영은 총통화에 대한 수요가 안정적이고 실물경제부문의 상황이 금융경제 부문 상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에 유용한 것이다. 1980년 후반부터 금융규제완화, 신금융 상품도입, 비통화성 금융자산의 급격한 팽창 등 金融條件이 계속 변천되고 있다. 이 변천하고 있는 상태에서 通貨需要의 安定性(Stability of Money Demand)은 기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안정적인 통화수요를 실증적으로 포착하기는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금융부문이 향후 국제화됨에 따라 금융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한국의 금융,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국제시장과 직접 연결될 때 환율과 이자율은 國內와 海外市場 要因에 의하여 결정되게 된다. 국내 이자율이 국제 이자율 보다 높은 상태는 환율을 높이 평가하게 되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국내금리가 국제금리에 가까운 수준에서 움직이게 되도록 하는 과제가 남게 된다. 이자율이 저수준에서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通貨價値의 안정을 통한 기대 인플레이를 저수준에 머물게 하고 만성적인 자금의 초과수요를 제거하기 위한 조세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금융정책의 이자율목표는 인위적 직접적 통제 수단에 의해서 달성되어서는 결코 안되고 금융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금융당국의 국민으로부터의 신용이 이자율 저수준

유지 달성을 위해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금융당국의 신용을 보장하는 제도장치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産業政策은 한국경제의 초기발전단계에서는 고무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선별적 산업정책이 21세기에라도 지속된다면 수단방법의 적정성 측면에서 의문이 야기되고 무역마찰을 가져 오게 한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경제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 특히 정부가 기술여건 변화에 대응하기는 더욱 더 어렵다. 산업정책을 통하여 정부가 제품의 需要가 있는 기간내에 상품공급이 가능하도록 산업육성을 추진하기는 실로 어려운 과제인 것이다.

산업정책이 國際競爭力 伸張을 위한 것이라면 자체 기술 연구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환경이 국내에서 조성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연구하는 분위기가 기술발전의 초점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産業支援政策은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연구와 기술개발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기업이 제품과 기술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제품이나 특정한 기술개발과 응용은 기업이 자기책임과 재원 조달하에서 시행하도록 기업에게 맡겨야 한다. 기업이 재원조달에 책임을 지게 하는 동시에 기업의 특정한 산업분야에의 진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제한과 규제도 제거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특정한 기술이나 연구, 예를 들자면 産業 廢棄物 처리에 관한 연구를 유도하는 것이 국가적 그리고 세계관점에서 정당화된다면 정책 금융지원이 아니고 조세감면혜택과 같은 재정부문의 지원을 통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VI. 結 言

다가오는 統一經濟時代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국가의 기본전략을 다시 짜야 할 시점이다. 완전한 통일을 달성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한 것은 남북경제통합을 위한 획기적인 진전이 금세기중에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질서의 급격한 변화를 북한만이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의 북한 경제를 보면 남북경제력의 격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렇다고 해서 독일과 같이 북한을 흡수 통합할 만큼 경제력의 절대우위를 확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獨逸 통일후의 경제적 혼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시간이 걸리

더라도 북한의 경제력도 키워 주면서 우리경제도 함께 키워나가는 동반 성장형 전략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소련의 붕괴와 동구 공산권의 몰락으로 시장과 경제적 파트너를 잃어버린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식의 정치체제와 점진적인 개방화와 市場經濟體制의 도입으로 나가리라고 전망된다. 南北經濟協力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어떻게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면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는 남북경협을 확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우리경제는 21세기에는 모든 사람이 先進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경제가 선진단계에 진입하고 그곳에서 정착할 것인가 또는 그렇게 못할 것인가는 世界環境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국내요인 특히 개인의 개성이 존중되고 이노베이션이 나올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결정적인 것이다.

선진화가 실현되기를 원하면 세계의 흐름과 우리가 서 있는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요구하는 제도를 수용하고 개혁을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개혁과 변화를 가능케 노력하는 것이다. 그들이 해야하고 그들이 참가 해서는 아니된다는 排他的 태도로 임해서는 선진화가 성취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경제는 세계경제와의 直結度가 높은 개방경제로 변천하고 있다. 우리경제는 시장기능 중심으로 운영되어져야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변천하고 있다. 과거에 유효하였던 권위주의적 경제정책방법은 역사기록으로 남게 될 시점에 도달하고 있다.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와 시장경제원칙내에서 우리경제가 만족스러운 성장과 형평 달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과 행동방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경제를 연구하는 우리는 한국경제를 진단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할 과제를 맡고 있다. 새로운 발상과 정책제시가 비록 지금 수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회에 제공해 줄 위치에 있는 것이다. 세계대공향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경제사고와 정책방향을 제시해준 Keynes의 저서 一般理論(General Theory)의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13. Swedberg, R.(ed.), *Joseph A. Schumpeter - The Economics and Sociology of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14. Stigler, G. J., *The Citizen and the Stat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5.
15. Thurow, L., *Head to head: The Coming Economic Battle Among Japan, Europe and America*, Morrow, 1992.
16. U.S.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Competing Economics: America, Europe, and the Pacific Basin*, U.S. Congress, 1991.

“경제학도와 정치철학자의 아이디어는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것 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중략) 경제와 정치분야에서 종사하는 분중에서 26세나 30세가 지나면 극히 소수의 종사자만이 새로운 이론에서 영향을 받는다. 기존의 공무원과 정치가가 현실과제의 해결을 위해서 적용하는 아이디어는 새롭게 제시된 이론이 아닐 확률이 높다. 그러나 결국 선이나 악에게 위험한 것은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가진 기득계층의 이해가 아니고 아이디어로 귀착되고 마는 것이다. (But, sooner or later, it is ideas, not vested interests, which are dangerous for good or evil.)”

參 考 文 獻

1. 國家經營戰略研究院, 『2000年代를 바라보는 國家經營 Vision과 政策代案』, 1992.
2. 郭承榮, “韓國經濟의 成長과 均衡의 課題,” 『經濟學研究』, 第37集 第1卷, 1989. 12, pp. 145~167.
3. _____, “韓國經濟 活性化方案,” 『韓國經濟新聞』, 1992. 10. 22.
4. 大韓民國政府, 『第7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 計劃, 1992~1996』, 1992.
5. 鄭雲燦 外, 『挑戰받는 韓國經濟』, 韓國信用評價(株), 1990.
- 6) 趙 淳, “對內외 經濟環境의 變化와 韓國經濟의 進路,” 『韓國銀行 調查統計月報』, 1992. 5.
7. 趙 淳, “21世紀를 바라보는 韓國經濟의 課題와 進路,” 韓國能率協會主催 夏節세미나 基調講演, 1992. 7.
8. Abdullah, K., and T. Al-Mansur, *Cultural Dynamism of the 21st Centry*, The First African Arabian Press, 1989.
9. Becker, G. S., “The Myth of Industrial Policy,” *Business Week*, May 25, 1992.
10. Keynes, J. M.,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MacMillan & Co., 1936.
11. Moyers, B., *A World of Ideas, Conversations with Thoughtful Men and Women About American Life Today and the Ideas Shaping Our Future*, Doubleday, 1989.
12. Nye, J. S., “What New World Order?,” *Foreign Affairs*, Spring 1992.